#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6차 회의록

**일시** 2/15(수) 13:30
**장소** 성북아동청소년센터 3층 회의실
**참석** 고경남, 김경서, 김기민, 김유리(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정윤주 부단장 대리 참석), 김종건, 김종환, 김희자, 박정근, 이선영, 이종안, 홍수만, 황선영 등 12명
**위임** 길정수, 김태석, 박현숙, 배정학, 서정례, 송민기, 이미경, 이원교, 임진규, 최도용 등 10명
**참관** 김창주(서울협치추진단 협치지원관), 문혜성(성북구청 마을민주주의과), 박선영(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이경임(장위석관지역 보육반장/장위도시재생주민협의체 총무), 전광철(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 부단장) 등 5명
**기록** 김기민

- 성원 확인
    - 총원 : 26명
    - 참석 : 출석 12명 + 위임 10명 = 22명
    - 불참 : 4명
    - 현장 출석 및 위임 인원 합쳐 참석자 22명으로 과반수인 13명 이상 참석함에 따라 6차 회의가 성원됨을 확인

- 전차 회의록 낭독 : 2/1(수) 준비위 5차 회의록 (별첨)
    - 낭독 : 의장
    - 별도 수정 의견 없이 전차 회의록 승인됨.

- 현황 공유 (안건지 참조)

- 안건
    - 창립총회 연기

- 배경 설명 (의장)
- 내부적으로 총회 일정을 잡아놓고 그에 맞춰 준비하면  좋겠다. (이종안)
- 서울시는 7월까지 한다고 한다. 구청과도 협의해서 충분히 시간 갖고 진행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서로 이야기를 들은 건 듣고 해야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 (김종건)
-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이왕 시작한 거 총회든 뭐든 간에 빨리 하면 좋겠다. 나와 봐야 그 분이 그 분이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한다.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박정근)
- 금요일 미팅 후 관계 부서에 미팅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늦어도 다음주부터 3월 중순까지는 한 달 동안 정기 회의 일정을 받아서 그 안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기존 창립총회 일정이 3월 초이니 3월 말이나 4월 초쯤으로 연기해주십사 요청드린다. (문혜성)
- 4개월 정도 경과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만남의 자리 만든다, 만나보고 하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게 늦다. 성북구 협치는 관에 들러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박정근)
- 요식 행위라 할지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총회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총회 날짜 다 정해놓고 참여만 하라 하는 식은 효과적이지 않다. (김종건)
- 두 분 의견이 맞지만 조율하자면, 날짜를 정하고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정하는 게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다.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이렇게 날짜를 연기했으나, 어렵다면 다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하면 될 것. 일정을 고정해놔야 일 추진이 용이하다. (황선영)
- 용이한 추진을 위해 내부적·실무적으로 예정 일자를 정해 놓되, 외부에 공표하거나 공식화하지는 않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부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새롭게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수정하는 등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기민)
- 협치를 추진하다 보면 민, 관 어느 한 입장만 강조할 수 없고 서로 조율하고 맞춰야 한다. 창립총회 준비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하되, 날짜를 너무 확정짓진 말고 추진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자. (홍수만)
- 4월 말은 너무 지연되는 것 같다. 3월 말 정도로 하면 좋겠다. (이선영)
- 지연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기획하여 교육 받는 것을 제안한다. (홍수만)

- 은현기 팀장이 현장 방문 수행 일정이 잡혀 부득이하게 주무관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미팅 주선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노력을 더 기울일테니 그 시간을 부탁드린다. 너무 늦지 않게 부서 협의 잘 진행해서 준비하겠다. (문혜성)

○ 분과 재조직

- 구청 부서 개편은 언제쯤? (이종안)
  - 1년에 한 번씩은 개편이 있었다. (홍수만)
  - 구청 조직은 언제든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다. 지금 규약 상으로 분과 고정해버리면 차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제별로 분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혜성)
  -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팀이 과거에는 마을민주주의과에 있었다. 지금은 마을사회적경제과로 옮긴 상태. 마을만들기 분야는 기존 분과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마을계획의 경우 법령에 기반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 기반 사업. 언제 없어질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컨디션에 맞게끔 조직 구성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다. (홍수만)
- 청년 분야는 어디로 배정해야 할지 아직 미정.
  - 일단 기타 분야로 배정함.
- 분과 구성
  - 교육 : 교육, 보육
  - 건강 : 건강, 보건
  - 도시환경 :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생태환경, 주거환경
  - 복지 : 복지, 인권
  - 문화 : 문화, 예술
  - 주민자치 : 마을계획, 참여예산
  - 지역경제 : 사회적경제, 전통시장
  - 기타 : 청년 등
  - 분과 소속 재배치는 7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규약 4차 수정안 검토

- 제4장 운영위원회 > 제15회(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 ④종교인 선임 자격 제한에 대한 이의. (김종건)

- 종교는 갖고 있지만, 직책을 수행하는 분들은 단체의 장을 맡는 것이 통상적으로 제한되지 않나. (김희자)
- 복지 분야를 보면 목사, 신부, 스님 등이 참여하고 위원장을 맡는 사례들이 있다. 어느 분야든 성직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김종건)
- 신자는 괜찮다. 종교의 대표자 등이 협의회 대표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정관 수정안 상으로 평회원으로 참여하거나 분과위원장, 운영위원 등을 맡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박정근)
-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건지? (김종건)
- 협의회 내에서 협치 외에 다른 분야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박정근)
- 그건 편견이다. 내가 목사다. 성북구에서 35년 동안 봉사 활동 해왔고, 개인 종교로 공적 영역에서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것은 종교에 대한 역차별이다. 규약에 문서화하여 넣을 필요는 없다. (김종건)
- 왜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듣고 싶다. (김경서)
- 이 규약이 존속된다면 차별을 감수하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나갈 수밖에 없다. (김종건)
- 단체 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시는 분이 특정 종교의 성직자일 경우 편향성을 갖고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 단체를 볼 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인지? (김경서)
- 종교도 여러 종교가 많다. 위원, 회원 참여는 무방하지만 특정 종교의 성직자가 단체 대표직을 맡는 것이 우려되는 것. 목사님이 대표를 맡았을 때 성당, 불교 등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종안)
- 김종건 준비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장을 할 수 없다면 활동 안하겠다는 것인지? (김경서)
- 그런 것이 아니라 자격 제한으로 인한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정관 수정안이 확정되면 성직자는 일정 부분 권한이 반감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 (김종건)
- 4차 정관 수정안 상의 정치인, 공무원, 성직자의 대표 선임 자격 제한이 통상적인 언급인 건지, 협치 모임에서 심각하게 그

정체성을 훼손할만한 쟁점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김경서)

- 내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은 차별이다. (김종건)
- 실정법 체계에서도 필요에 따라 일정 부분 권리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제한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경서)
- 현직 대표자 가운데 성직자들이 많다. 굳이 협치 영역에서만 제한을 둘 이유가 뭔가. (김종건)
- 이 수정 조항에 대해 공감한다. 내가 개신교인데 스님이 대표라면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 한편으론 어느 단체에나 회원이 피선거권, 선거권 다 갖는 것이 보통인데 이 제한이 의문이 들기도 한다. 운영위원장 선출시 그런 분들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회원의 자격은 두면서 이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본다. 문서화까지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황선영)
-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규제 제한이 없을 경우 인원 동원의 우려가 있다. (김경서)
- 오히려 자격 제한 두는 규약들이 더 많다. (김희자)
- 회원 역차별 쟁점이 포커싱 된 상태. 사실 내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표를 맡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평등한 것 아닌가. 굉장히 한정적인 차별인 것. 회원에 대한 역차별은 아닌 것. 대표를 맡고자 하는 종교인에게는 역차별일 수 있지만. (김경서)
- 그것은 궤변이다. 시작점부터 동일하지 않은 것 자체가 차별이다. (김종건)
- 협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의견 갈린 부분에서 서로 맞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갈등을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면 좋겠다. 권리의 제한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규정 만들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최소화하여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가능성인데, 그 우려는 모임 운영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필요하다. 제한을 두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본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면 좋겠다. 대표에 대한 자격 제한이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자격 제한이나

차별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회원으로 참여했다가 대표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다. (센터 전광철)

- 이 조항이 맞나 옳으냐가 아니라, 이 조항을 존속시킬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할 것 같다. (김경서)
- 직업을 이유로 임원 자격 제한을 하기 보다는, 그 분들이 오셔서 활동함에 있어서 정치, 종교적 활동을 제약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문혜성)
- 규정 폐기가 안 되면 그만하겠다는 말씀 듣고 놀랬다. 하다 보면 규약은 바뀔 수도 있는 것. 앞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규약을 참고하면서 추가하게 된 규정인데,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만두시겠다고 하시니 놀랍고 실망스러웠다.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수정안이 상정됐고, 오늘 다시 재론하고 있는데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좀 더 앞장서서 함께 해주시다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깰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희자)
- 이 제한 규정은 종교인들은 협치 활동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김종건)
- 첨예한 부분이고 고민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으로 각자 다른 입장이 합의를 보거나 상대의 입장완벽히 납득하긴 어렵다고 본다. 이후 몇 차례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한 뒤 수정안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홍수만)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설명 (김창주 서울협치추진단 협치지원관, 서울시 지역공동체 담당관실 주무관)

    - 운영규정이라는 것은 조직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 시민협력플랫폼이란 사업은 왜 할까 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필요성에 걸맞는 조직의 방향을 갖고 있는지 고민해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겠다.

    - 시민협력플랫폼은 지역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 협치 개념, 활성화 방안 등은 각자마다 다르지만 시민협력플랫폼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협치 추진 방향. 자치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해 협치 사업 추진. 그 과정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들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함.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민관이 함께 협력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보다 더 큰 문제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다 협력하라는 것은 아니고, 협력했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된다고 보는 분야, 기존에도 협력하고 있지만 좀 더 고도화시킬 필요 있는 분야를 활성화하고 보조하기 위함.

- 서울시 협치사업의 골자는 민관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수립사업을 통해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연습, 훈련하는 기회를 3년이란 한시적 기간 동안 제공. 민관 협력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함.

- 민관이 협력을 하려면 서로 대등한 관계여야 함. 어떤 이슈에 있어 종속되지 않고 대등하게 논의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함. 현재 지역 현황은 그렇지 않고, 갑을 관계 같은 측면이 있다. 협력하고 있는 것같지만 동원되어 있는 것 같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민은 쫓아가기 바쁘고, 구청은 끌어당기기에 급급. 지역 시민사회 내부가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민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거점을 만들어보자. 일부 몇 개 시민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북구에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정거장)을 만드는 것. 시민협력플랫폼 사업만 강조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공익단체 지원사업과 뭐가 다른가 의문을 갖거나 오해할 수 있음. 역량 강화시킨 뒤 민관 협력, 협치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수행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성북구 시민사회 역량 강화겠지만, 3자의 파트너십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나갈 것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함.

- 작년 6월부터 공고. 각 자치구별로 1개 선별. 자치구별로 설명하고, 지역 내에서 공론화 과정 거쳐서 성북구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 과정, 그리고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 선정 후 시-구-시민사회가 3자 협약 맺는 과정으로 이어짐.

- 협력을 위한 협력이 아닌,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각자 단체가 고유 사업만 추진하는데 바쁘다. 이제는 여러 단체가 공통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 아쇼카 재단은 프로포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원한다. 지역 혁신가가 압력, 경제적 제약 없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인건비 제공하는 재단.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라고 하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네트워커가 있다면 그 사람의 활동을 3년간 지원해줄테니 그 사람을 더 성장시켜 달라는 것. 시민협력플랫폼은 3년간 한시적 사업이고,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함.

- 관과의 협력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있어야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 알맹이를 만들어갈 수 있다.

- 질의/응답
  - 8개 분과가 있는데 각 분과마다 신청할 수 있는지? (박정근)
    - 자치구별로 한 곳만 가능하다. (김창주)
  - 감시, 비판 기능이 중요한데 본 사업은 그것만이 시민사회 역량이 아니라 스스로 강화시키고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목적의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 관과 대척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 (김창주)
  - 시민협력플랫폼 활동가에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게 3년 뒤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로 그 사람의 성과를 평가할 건지.
    - 자치구 시민주체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 시민 주체라고 하는 것도 추진단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내려야 하는 것. 이 시민협력플랫폼은 어디까지를 위한 것이냐. 거점도 여기선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 거점은 성북구에 맞게끔 어떻게 만드는 게 효과적일까 고민해야 함. 궁극적으로 3년 동안 플랫폼 만들어 운영할 때 단계별 사업 전략을 갖고 있다. 6개월 안에는 오프라인/온라인 거점 만들기. 카페, 코워킹스페이스 등.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민사회가 역량을 강화시키고 활동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3년 뒤에는 법인, 재단 등 거점 조직을 만드는 것. 자립하는 조직을 당장 만들어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반이 없으니 시민사회 내부의 자산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것.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지역별 욕구에 맞춰

설정하면 되는 것. 공동체 자산 형성, 시민활동가 양성기관 설립 등등. (김창주)

- 다른 구에서는 언제부터 논의가 됐고, 실제 추진되고 있는지? (김종환)
  - 작년도 10개 참여. 노원구는 신청 철회하고 강북, 마포, 은평, 서대문, 동대문, 관악, 강동, 광진, 성동 등 총 9개 선정. 지역사회 시민단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구청과 관계 맺고 사업하고 있는 조직들이 협력을 위한 욕구 확인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신청.
  - 마포, 은평처럼 어느 정도 시민사회 활동 기반이 존재하는 지역은 기존 형성된 네트워크를 더 고도화하겠다는 목표, 반대로 활동 환경이 척박한 지역은 초기 기반을 마련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했다. (김창주)
  - 성북구는 신청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지. 제반 여건, 환경 등을 살펴보고 결정하면 좋겠다. (김종환)
  - 준비 초동 과정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되, 함께 협력을 모색해나갈 주체 발굴 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 사업 시작한 이후에도 어떤 시민단체, 주민에게도 개방되어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함. (김창주)
- 협의회 사업계획(안)은 시민협력플랫폼을 염두하고 수립한 것은 아니고, 현재 지역사회 민간 영역을 조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고민해본 것. 협치를 받아들일 행정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부분적으로는 거버넌스 조직, 중간지원 조직도 있지만 각자 따로 있다 보니 형식적이고 동원되는 측면도 있다. 운영 방안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 사업 성과를 내거나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운영 규칙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도 못하고 행정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온 게 사실. 이런 컨디션에 대한 점검과 파악이 선행되어야 시민협력플랫폼사업, 지역사회혁신계획수립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 (홍수만)
-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고민하실 때 본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보시고, 수행했을 경우 여러 가지 역할을 어떻게 협력하여 분담할 것인지, 그 준비가 되어있는지 숙고해보셔야 할 것.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안 되게 하려면. 이해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요구, 제안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숙고가 필요하다. (김창주)

- 다음 회의

    - 일시 : 3/2(목) 13:30
    - 장소 : 안암동주민센터/자치회관 4층 마을회의실

    - 안건
        - 규약 수정안 논의
        - 준비위원회 내부 역량 강화 교육 커리큘럼 및 일정 논의
        - 재편성된 분과 조직 기준 배치 조정
        - 기타